

진국과 개도국의 힘 겨루기

유엔개발계획(UNDP)의 94년 보고서는 "세계 많은 곳에서 이루어진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환경파괴, 핵확산, 인권침해, 구조화된 가난, 테러리즘, 에이즈, 마약련 범죄증가 등의 문제로 인류 모두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적고 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의 새로운 개발 및 협력 패러다임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인간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다소 생소한 이 개념은 '인간중심의 개발' 혹은 '민중중심의 개발'과 함께 이번 코펜겐 정상회담의 키워드다. 기존의 경제성장, 수출, 소비증대, 생산력 개념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남북격차, 빈부격차의 감소, 사회복지, 환경, 인권, 성평등과 같은 인간적 삶의 질' 문제로 관점을 옮겨가자는 제안이다.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국가의 노력과 아울러 지구적 차원의 합의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사회개발 정상회의의 주제는 빈곤의 경감과 감소, 생산적 고용의 증대, 사회적 통합 강화의 세 가지다. 이러한 주제가 결정된 배경은 94년 2월 사회개발 정상회의 제1차 준비위원회에 제출한 갈리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에 근거한다. 보고서는 오늘의 세계를 다음과 같이 그리고 있다. "오늘날 지구적 차원에서 절대빈곤이 증대하여 다섯명 중 한명(10억)이 절대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다." "세계 전체인구의 20%가 전체소득의 2% 이하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화된 국가에서도 실업이 증대하고 있으며 반실업과 경제적 이민자의 수도 증대하고 있다." 개발된 지역에서조차 사회적 해체현상이 증대하여 오직 열명 중 한명이 자신들의 삶을 규정하는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제도에 충분히 참여하고 있다." 지구적 차원의 문제의 일단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사회개발 정상회담의 취지와 주제는 모두가 합의하였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 들어가면 치열한 논쟁이 시작된다. 모든 국가가 자국의 이해관계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한 이해 당사자는 크게 두개의 블록으로 나뉘어진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이 한편이며 다른 한편은 중국과 77그룹으로 불리는 개발도상국 및 후진국들이다. 이해관계는 때로 정치적 문제일 수도 있으며 경제적 문제일 수도 있다. 지난 1월에 끝난 3차 준비위원회에서는 전체 합의사항 중 95% 정도가 결론을 보았지만 나머지는 3월 본회의로 이월되었다.

많은 논쟁은 '돈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부자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도와줘야 한다는 합의는 도출되지만 '얼마와



날로 증대되는 지구촌의 빈부격차 문제에도 유엔의 관심이 돌려져야 할 때다.

어떻게'를 논의하기는 쉽지 않다. 3차 회의에서도 끝내 합의에 실패한 외채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개도국과 후진국들은 선진국들에게 빌린 외채에 시달리고 있기에 이를 탕감하자는 주장이며 선진국들은 가능한 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에콰도르의 예를 들면 이 나라 국민의 70%가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정부예산의 40%가 외채상환을 위해 쓰인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개도국과 후진국의 외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부분적인 탕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한국의 외채는 '상환능력'이 충분하기에 제외된다.

또 다른 돈문제는 '공식개발지원기금'(ODA)의 증액 문제다. 이 문제 역시 1, 2차 준비회의를 통해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으며 3차 회의에서 가까스로 합의를 도출

하였다. 하지만 개도국들의 입장은 거의 관철되지 않은 채 부자나라들이 '빠져 나갈 구멍'만을 크게 만들었다. 합의된 문서를 보면 "국민총생산의 0.7%로 합의된 ODA를 '가능한 한 빨리'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상 부자나라들의 '양심'에 맡기자는 것에 다름 아니며 어떠한 의무조항이나 일정 등의 시간적 목표치가 빠져 있다.

직접적인 돈문제와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역할을 둘러싼 개도국의 '구조조정문제'는 심각한 쟁점 중의 하나다. 브레튼우즈체제의 핵심 기구들이 전후 50년 동안 진정한 발전이 아닌 자기 기구의 '이윤'을 추구하는 경영을 해왔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선진국의 정치·경제적 이해에 따라 운영되어온 국제통화기금의 경우 개도국의 외채를 누적시키고 빈곤을 구조적으로 심화시켰으며, 자연환경을 파괴하였다는 비판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환율의 평가절하, 국영기업의 민영화, 수출주도 경제성장 등이 결국은 일국내의 빈곤을 심화시키고 아동·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약화시켰으며 남북의 격차를 벌려놓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브레튼우즈체제가 95년에 대대적인 50주년 축하행사를 갖고자 하는 것에 반대하며 일본의 NGO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50년으로 충분했다!' (50 years enough!) 캠페인은 이러한 맥락을 반영하고 있다.

브레튼우즈체제에 대한 비판은 비단 개도국이나 NGO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번의 3차 회의에서도 캐나다와 호주 정부는 "브레튼우즈체제의 역할과 권한을 재검토하고 경제사회이사회 등의 유엔기구가 국제금융기구의 활동을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다. 합의된 문서에서도 '기존의 구조조정이 갖는 해로운 사회적 결과가 지적되었으며 "유엔과 브레튼우즈 기관 사이의 조정과 구조조정계획의 수립과정에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유엔기구와 NGO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안이 합의되었다.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갖을지는 미지수지만 구조조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합의된 것은 적지 않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의 최초의 공식적 평가와 합의인 것이다.

이번 사회개발 정상회의의 쟁점이 경제적인 문제로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예상과는 달리 경제적인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자 선진국의 경우는 비경제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자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77그룹의 눈에는 경제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술책'으로만 보

일 뿐이었다. 비경제적인 문제로는 민주주의, 인권, 참여, 여성, 인종, 종교 등의 영역이 포괄된다. 노동자의 권리확보문제는 3차 준비위에서도 합의되지 못하고 본회의로 이월되었다. 사회발전의 요건에 대한 논쟁에서 선진국들은 각국 정부의 투명성, 책임성, 민주성 확보 등을 강조한다. 쉽게 말하면 사회발전에 실패한 나라들은 '개도국의 각국 정부가 잘 못해서'라는 것이다. 77그룹과 중국은 나라별 책임이 명문화되는 것에 반대하며 개발을 위한 선진국의 지원과 책임을 강조한다. 중국의 경우 인권 문제에 대한 조항은 집요하게 자국의 '특수한' 사정을 강조하기도 한다.

몸은 77그룹, 마음은 OECD

코펜하겐회의에 임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은 편하지만은 않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한국은 경제력에서 선진국의 문턱을 넘보는 중간위치에 있다. 따라서 경제적 이해에서도 선진국과 77그룹 어느 한편의 이해와 동일하지는 않다. 경제협력기구(OECD) 가입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지원이 필요하며, 유엔의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서는 77그룹의 표가 절대적이다. 또 다른 측면은 한국의 외교가 사실상 냉전시대를 통해 그동안 미국의 그늘에 가려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경제력에 걸맞는 외교력을 갖고 있지 못한 원인이다. 또 유엔외교의 경험 이 상당히 짧은 것도 부정적인 요인이다. 세 차례에 걸친 준비회의 동안 한국 정부 대표단의 단장을 맡은 외무부의 서대원 국제기구 심의관은 한국의 입장을 '몸은 77그룹, 마음은 OECD' 라는 말로 압축한다. '코펜하겐 회의의 가치, 철학, 지향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가 ODA를 선뜻 증액할 수 있는 준비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ODA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문제에서도 그렇고 정부예산상의 문제도 쉽지만은 않다고 한다.

외국인에게 한국은 세 가지 사실로 잘 알려져 있다. 하나는 기적과도 같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는 것, 학생이나 노동자의 데모가 하루도 끊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남북으로 분단되어 항상 으르렁거리며 싸우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통일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이미 우리의 고도경제성장은 성수대교 붕괴 등 빈번한 대형사고로 빛을 바래고 있다. 턱없이 부족한 사회복지 시설과 인권, 민주제도, 빈부격차, 남녀평등, 지역갈등, 환경문제까지 염두에 둔다면 한국에서의 '지속 가능한 인간개발'은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연설할 기회를 갖고

있다.
 설은 2
 가 주
 선진국
 한 '모
 들은
 보다는
 안 한국
 각하기.
 청와
 발독재.
 정확으
 한다.
 철저한
 만 갖고
 한국 정
 의 대책
 로든지
 지만 가
 어야 한
 도 이것
 현하기
 다.
 이제
 다. 책
 이 돈으
 취할 준
 않는다.
 무잡잡
 노동력
 속해야
 가 한국
 한국 기
 다. 과
 일들이
 화가 이
 더 도덕
 한국사
 코펜
 미로 귀
 세계화

가. 어느 다른 회의보다도 사회개발 정상회의에서의 연설은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김 대통령의 연설은 세계 각국에게 주목하고 있다. 한국이 이룩한 기적적인 고도성장은 선진국들에게는 브레튼우즈체제하에서 경제성장을 이룩한 '모범사례'이며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3세계 국가의 정들은 한국모델을 본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한국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경험이 여타의 개도국에서 되살아나는 것은 생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에서 준비하고 있는 김 대통령의 연설문은 '개도국의 후유증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문민정부의 개혁정책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다'는 논리로 작성될 것이라고 한다. 현실의 후유증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개혁정책의 철저한 진행만 보장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다. 국민총생산의 0.04%에 불과한 현재 한국 정부의 공식개발지원금(ODA)의 증액을 위한 우리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또 외채의 탕감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결정된다고 할 때 우리가 비록 외채 4위의 국가이긴 하지만 가난한 나라에 빌려준 돈을 포기할 각오도 되어 있어야 한다. 비록 당장 경제적 손해를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결론이라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의식 전환이 시급히 요청되는 것이다.

이제 언술만 늘어놓는 세계화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책임성이 따르는 세계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 책임성으로 나타날 때 한국의 재정경제원은 분명한 선택을 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한국에서 우리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라는 까잡잡한 외국인 노동자의 절규도 해결해야 하며, 낮은 노동력을 찾아 동남아로 나간 한국의 자본과 기업도 단행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는 노동쟁의 중 70%는 한국인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폭정'은 이제 낫설지 않은 사건이 되어버렸다. 과거 미국, 일본 기업이 이리, 마산에서 저질렀던 일들이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세계화가 이런 것이라면 차라리 대원군의 '쇄국정책'이 훨씬 도덕적이다.

국사회에의 파장

코펜하겐 사회개발 정상회의는 한국사회에 어떠한 의도로 귀결될 것인가. 에이펙회의가 내용 없는 국제화, 계화 구호로 연결된 것처럼 코펜하겐회의가 그런 쪽으

로 활용된다면 실망 그 자체이다. 하지만 우리는 낙관적인 경험 또한 갖고 있다. 92년의 리우 환경회의가 당시에는 그 효과를 점치기 어려웠으나 국내에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어쩌면 성공 여부가 의심스러웠던 '쓰레기 종량제'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은 리우 환경회의의 국내적 귀결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시민사회에서 환경보호 의식의 확실한 정립과 환경단체의 활발한 활동 역시 리우 환경회의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코펜하겐회의는 한국사회에 발전문제에 대한 관점의 전환, 즉 사회복지 예산 증액과 인간적 삶의 질의 문제, 한국 정부의 ODA문제 등이 공론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로서는 노인, 여성, 빈민, 장애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배려가 환기될 것이다. 사회발전이 단순한 경제성장, 경쟁력 강화라는 양적인 것이 아니라 인권, 민주주의, 평등, 공동체 등의 개념과 관련되어 있음이 공론화되는 계기도 될 것이다. '국가안보'가 아닌 '인간의 안전'(human security) 개념이 전통적인 논리와 개념을 대체하는 시도가 시작될 것이다. 탈냉전의 상황은 정부, 국가안보, 영토안보 등의 전통적 개념이 끊임없이 일국적 혹은 지구적 차원의 시민사회 확대에 의해 도전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코펜하겐회의에 한국의 민간단체도 대거 참여할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에 대한 견제세력이며 동시에 세계시민으로서의 몫을 수행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정부간의 회담과 함께 민간단체의 회의가 함께 열리는 것은 정부의 활동만으로 지구적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에 기초한다. 시민사회의 동의와 참여 없는 정부활동은 항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간단체의 활동에 인식한 한국 정부로서는 되새겨볼 만한 대목이다.

세계화라는 말이 요란하다.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세계화가 단순한 수식어인지 아니면 지구촌 일원으로서 책임성의 발로인지를 이제 세계는 주목하고 있다. 세계화는 인권과 민주주의, 경제적 평등과 같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인류의 보편적이며 진보적인 가치를 모든 민족과 국가가 공유하고 실현하며, 민중의 이해와 요구에 기초한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데에 기본 좌표가 있다. 한국사회의 제도와 의식에 대한 개혁과 발전 역시 이를 기준으로 한다. 세계화시대에 도전하는 한국 정부의 선택을 기대해본다. ■

인권 자료 1	
6-3-9	88
음료의	

88. 3/10. 62. ①

코펜하겐 / AFP 연합뉴스

사회개발 정상회의 코펜하겐 통신

사회개발정상회의의 사흘째인 8일은 '세계 여성의 날'로 코펜하겐 정상회의장에서도 이를 기념하고 여성의 권익 신장을 요구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으며 한국은 이날 지역별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유엔개발계획은 이날 세계의 여성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사회개발정상회의에 제출해 기혼여성의 절반이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며 "어떤 사회도 여성을

◇...사회개발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비정부기구 대표 8천여명은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이날 밤 시내에서 1시간 동안 횡보 시가행진을 벌이며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체제를 비난했다.

제3세계 비정부기구의 여성대표 12명도 보다 많은 개발자원과 제3세계 부채문제의 구체적 해결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케냐의 비정부기구 그린벨트운

서구쪽 입장이 반영된 타협안이 통과됐지만 이 조항은 앞으로 가족문제를 다루는 모든 국제문건에서 인용될 것"이라고 채택의의를 설명했다.

◇...각 지역별로 27명을 뽑는 총회 부의장국 가운데 아시아지역에 배당된 6개국 선출을 놓고 한국 등 9개국이 후보로 나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7일 벌어진 마후조정에서 스리랑카가 자진사퇴하는 대신 스리랑카가 지명한 한국·일본·중국·인도·인도네시아·카타르가 후보로 결정됐으나 탈락한 파키스탄·필리핀 가운데 필리핀이 부의장국을 고집해 진통을 겪었다.

한국, 부의장국 피선·가족조항 통과 여성의 날 맞아 권익신장 행사 다양

남성과 똑같이 대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기구는 보고서에서 △여성 2천명당 1명꼴로 강간을 당했고 △3분의1의 여성이 청소년기에 성적 추행을 경험했으며 △절대빈곤에 시달리는 13억명 중 70%가 여성이라고 밝혔다.

이날 코펜하겐 회의에서 여성교육 향상을 위한 미국의 1억달러 지원을 발표한 힐러리 클린턴 미 대통령 부인도 연설을 통해 현재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어린이의 3분의2가 여자이고 거의 10억명의 문맹자 중 3분의2가 여성"이라며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에 전 세계가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동의 완가리 마타이 대표는 "굶주린 여성 및 가난한 사람들과의 연대를 위해 농성을 시작했다"며 "이번 회의에는 구체적인 행동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대표단은 한국이 제안한 실천계획 제4장 81항 '가족관계 조항'이 전체 실무위원회에서 통과되자 크게 고무된 표정이다.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서는 가족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돼야 한다'는 내용의 이 조항은 가족을 중시하는 동양적 가치관 중심으로 되어 있어 동성부부도 인정하는 등 개인 가치를 중시하는 서구쪽이 반대 입장을 보여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박수길 유엔대사는 "부분적으로

그러나 8일 일본이 오는 8월 베이징 여성회의에서 부의장국이 된다는 양해 아래 양보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9일 총회에서 선출절차를 밟기로 했다.

◇...북한은 비정부기구 포럼 행사장에 자국 부스를 마련했으나 이곳은 안내자도 없는 데다 홍보물도 빈약해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다.

1평 남짓한 이 부스에는 김일성 홍보 및 북한 소개 책자 등이 놓여 있었으나 다른 나라 부스에서 일반적으로 영어책자를 배포하는 것과는 달리 덴마크어로 돼 있어 주목을 가져다놓은 것처럼 보였다.

코펜하겐 / 진재학 기자, 외신종합

11-1

95 2.6.88. D

“지구촌서 빈곤 몰아내자”

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 다음달 6~12일 코펜하겐서

1백20여나라 참가 ‘삶의 질 높이자’ 선언·행동계획 채택
준비모임서 외채탕감·원조기금 조성 선진-개도국 이견



서로 연관된 세계 발전단계가 다른 세 사람이 세상을 향해 몰아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덴마크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 로고는 협력과 희망을 상징하고 있다.

진재학 기자

전세계가 가난 퇴치를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유엔이 주관하는 사회개발정상회의가 다음달 6일~12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려 “지구촌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선언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채택하게 된다.

‘빈곤 퇴치, 생산적 고용 확대, 사회통합 증진’을 주제로 한 회의에는 김삼 대통령을 비롯해 세계 1백20여개국 정상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클린턴 미국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 회의는 90년대 유엔이 주관하는 7대회의 중의 하나로서 90년 아동정상회의, 92년 리우 환경회의, 93년 빈 인권회의, 4년 카이로 인구회의에 이어 코펜하겐 회의가 다섯번째이며, 올 9월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여성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유엔이 창설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유엔 탄생’이라는 목표 아래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을 위한 새로운 세계질

서 편성을 모색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유엔이 이 회의를 개최한 배경에는 저개발국의 빈곤상황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현재 지구상에는 5명에 1명꼴인 10억여명이 기아선상에 허덕이고 있으며,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자가 1억2천여만명이 이르고 있는 데다 해마다 1천3백만~1천8백만명이 빈곤 때문에 죽어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현재의 추세가 계속될 경우 앞으로 60년 안에 절대빈곤층은 지금보다 4배가 늘어난다는 추계가 제시되고 있다. 이와함께 개발도상국의 외채는 10년전보다 2배가 늘어난 1조4천억달러에 달해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인권·환경에서도 시각차

옛소련 몰락 이후 냉전체제의 종식은 인류에게 유례없는 경제·사회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로 기대를 모았으나 빈곤에 따른 개도국의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불안정으로 ‘냉전’이 ‘차가운 평화’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유엔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개발정상회의를 제안해 지난해 1월부터 뉴욕에서 3차례 준비모임을 가졌다.

이 준비모임에서 각국의 실무대표단은 빈곤 퇴치 등 사회개발과 사회통합을 위한 기본원칙과 보편적 공약사항에는 대부분 합의를 보았으나 외채 탕감 등 구체적인 각론에

들어가는는 개도국(77그룹)과 선진국(OECD)간에 입장이 크게 맞지 최종합의를 코펜하겐 전체회의로 넘겼다.

미합의 주요 쟁점을 보면 외채 탕감의 경우 개도국은 아프리카 및 최빈국의 채무를 즉시 없애주고 다른 개도국 외채도 단계적으로 감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선진국은 외채문제에 대한 개별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외채탕감 및 시한 설정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양진영은 아프리카 및 최빈국의 양자채무에 대해서는 이를 감면해주는 방향으로 입장이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개도국 지원을 위한 유엔의 공식개발원조(ODA)기금 조성을 위해 선진국이 지엔피의 0.7%를 각출하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개도국이 요구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해 원조기금의 20%와 국가예산의 20%를 반드시 사회개발과 사회복지에 쓰도록 하는 20/20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개도국의 경제구조조정계획, 인권, 환경 문제 등에 관해서도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갈려 구체적 표현방식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런 쟁점들은 3월6일~10일까지 열리는 고위급(각료)회의에서 마지막 조정작업을 벌여 12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하는 ‘선언’과 ‘행동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 서상목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표로 한 정부대표단은 직접해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개도국과 선진국의 중간 위치에 서서 이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아 위상제고의 기회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특히 이 회의의 참석과 함께 유럽을 순방하는 김영삼 대통령은 오는 10월 유엔총회에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겨냥한 정상외교에 중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선진-개도국 중간역할

코펜하겐 회의와 관련해 각국의 민간단체(NGO) 활동도 주목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약 2천여개의 민간단체들이 참가해 정부간회의와 별도로 ‘NGO포럼’을 갖게 되며 ‘선언’과 ‘행동계획’도 따로 발표한다.

한국에서도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연 등 10여개 단체가 ‘인간사회발전 한국포럼’을 결성해 40여명의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한국형 경제발전이 제3세계의 모범이 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NGO 포럼에 참가해 ‘선성장 후분배’를 앞세운 한국적 개발독재의 허상을 지적하고 다른 나라의 민간단체와 연대를 통해 정부간 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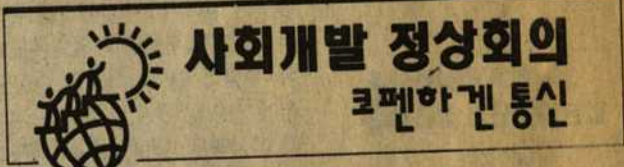
이들 단체는 특히 코펜하겐 회의가 끝나면 회의에서 채택한 ‘행동계획’ 등을 정부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25 7/8, 20. ①

유엔-비정부기구 '한마음'

선진국 양보 압력 손잡고 행사 사실상 '공동주최' 본회의장 자유출입·축제마당제공 NGO 각별배려

코펜하겐/진재학 기자



사회개발 정상회의

코펜하겐 통신

유엔 주관으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 사회개발 정상회의는 사실상 유엔과 비정부기구(NGO)들의 공동주최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회의가 제안되고 심사되기까지는 저개발국의 광범위한 빈곤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유엔의 상황인식과 외채탕감 등 개도국의 강력한 경제적 요구가 기본 추진력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저개발 및 개도국의 빈곤 완화, 고용 창출, 사회통합력 증진 등 정상회의가 내건 주제가 내용있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서방 선진국의 경제적 양보가 반드시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유엔, NGO 끌어들이려 상황 돌파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지난 91년 사회개발 정상회의를 제안했을 때만 해도 이런 사정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유엔은 이런 상황을 돌파해나가기 위한 국제 압력수단으로 비정부기구들을 끌어들이려 했다.

92년 리우 환경회의와 94년 카이로 인구개발회의 등 잇따른 각종 국제회의를 통해 그 역할의 중요성을 높여가고 있는 비정부기구로서는 인간존엄성 회복과 지구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유엔의 제의야말로 '달리는 말에 채찍'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정부기구들은 이에 힘입어 사회개발과 인

간의 안전보장 및 국제적 부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더 많은 투자와 양보를 하도록 자국 정부는 물론 주로 서방 선진국에 압력을 가했다.

유엔에 등록된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지난해 1월 1차 준비위 때 76개에 불과했던 것이 8월 2차 때는 2백85개, 올 1월 마지막 3차 준비위 때는 무려 2천5백개(대표 1만여명)가 공식 등록을 마치고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등 큰 세력으로 등장했다.

이번 회의의 주제가 광범위한 만큼 인권·환경·여성·아동·노동·빈민·보건·종교·과학·사회봉사·사회복지 등 셀 수도 없는 다종다양한 분야의 비정부기구들이 회의장에 몰려 들고 있다.

이 기구들에 대한 유엔의 배려는 각별하다. 이들은 취재기자도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본회의장에 유엔에 등록만 마치면 자유롭게 출입해 로비활동은 물론 자료 취득·배포, 회의장 룸 사용, 구두 및 서면연설 기회를 갖는다. 또 본회의장인 벨라센터에서 5km 가량 떨어진 옛 홀만 해군기지창에 마련된 '비정부기구 포럼'은 독자적인 프레스센터까지 갖춘 대규모 축제마당이다. 이곳은 각 단체가 사용하는 수백동의 부스와 각종 전시행사가 벌어지는 '지구촌 마을', 수백개

의 크고 작은 회의실과 코카스룸 등 각종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또한 50달러를 내고 등록을 마치면 덴마크의 어느 지역이나 무료로 다닐 수 있는 철도 버스 자유 이용권이 주어진다.

유엔이 이번 회의를 통해 노리는 목표는 자명하다. 즉 냉전체제 붕괴 이후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고 정부개발원조(ODA)기금 관리와 분배 등 경제사회이사회의 대폭적인 기능강화를 통한 '새로운 유엔'의 탄생을 기하자는 것이다.

경제사회이사회 강화등 꾀해

이번 회의가 무엇보다 앞으로 비정부기구의 기능과 역할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유엔 주변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한 사회복지 전문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21세기 새로운 복지사회 모형을 찾는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며 기존의 서구형 복지복가 모델을 대신할 이 새 모형에서 비정부기구의 역할은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의 성격도 국가에 대해 요구만 하는 데에서 사회개발 실천 프로그램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바뀌어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1213

11/7.82.4

외채·노동권 선진-개도국 격론

'어린이노동' 국가 재정지원 삭감 대립



사회개발 정상회의 코펜하겐 통신

세계 1백80여개국 정상 등 1만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일 개막된 제1회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는 많은 참가인원수 만큼이나 많은 말들이 오고가고 있다.

갈리 총장 국가책임 강조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개막연설에서 "우리는 이번 회담에서 어떻게 가난과 싸우고, 사회적 배제 및 해체와 투쟁하며, 어떻게 생산성 있는 고용을 창출하고, 세계적인 수준에서 사회적 책임을 일깨우느냐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인구의 4분의 1인 13억명이 가난에 시달리고 △15억명이 기초적인 의료혜택조차 받지 못하며 △세계 빈민의 3분의 2 이상은 여성인 데다 △빈부 격차는 60년의 2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활력 있는 사회정책을 펴나가는 데는 그 나라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5일 밤 서방 선진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은 회의 의제 및 선언 최종문안과 관련한 막바지 조정작업을 벌였으나 빈곤국의 부채와 근로자 권리 등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들은 유럽연합(EU) 주도로 어린이 노동금지 등 국제노동

기구(ILO)가 규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린이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일부 빈곤국들은 이런 움직임에 반발했다.

선진국들은 또 이번 회담을 통해 극빈국들의 대외부채 부담 경감문제를 논의할 의사는 있으나 이들 국가에 대한 부채를 무효화하거나 추가차관 제공은 논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공차관과 정부예산의 20%를 사회개발에 할당하도록 한 최종선언의 문구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처럼 회담 전부터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드러나자 회담참석자들은 이번 회담이 별 실효성 없는 회담이 되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헐릿없는 헐릿공연"

◇...마흐두브 울 하크 유엔개발계획 특별고문은 빌 클린턴 미 대통령 회의 불참을 놓고 덴마크가 연극(헐릿)의 무대인 점에 빗대 "헐릿 없이 연극 헐릿을 무대에 올리는 셈"이라고 혹평해 이번 회의의 가장 유명한 말이 되고 있다. 그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세계적인 빈곤이 자신들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인식이 없다"며 "빈

곤은 마약·에이즈·공해 등의 형태로 입국사증(비자) 없이 국경을 넘고 있다"고 이번 회의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서방선진국들에게 경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세계 각지의 2천여개 비정부기구들이 대표단을 파견해 실질적인 사회개발과 빈곤퇴치를 위한 정책입안을 다루는 이 회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13억명의 전세계 빈곤인구 가운데 약 20%인 2억5천만명이 이들 비정부기구의 지원을 받고 있는 등 비정부기구의 역할은 방전봉과 뒤 국가가 맡아왔던 많은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지난 70년부터 90년까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각종 지원을 위해 이들이 지출한 비용은 10억달러에서 72억달러로 증가했다. 코펜하겐/외신종합

한국 사전준비 소홀

◇...한국정부 대표단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주 덴마크 대사관과 외무부측은 사전준비 소홀로 서상목 수석대표(보건복지부장관)의 일정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어 대표단측의 불만을 사고 있다.

외무부측은 특히 대언론 창구조차 마련하지 않아 이번 회의에서의 한국 역할 홍보는 뒷전인데다 비정부기구 활동 등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이 오로지 11일 도착 예정인 김영삼 대통령 영접 준비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코펜하겐/진재학 기자

95 3/11 22.10



사회개발 정상회의 코펜하겐 통신

나흘째 최종선언문을 둘러싸고 격론을 벌여온 참가국 대표들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9일 자정인 협상시한을 3시간 연장하는 등 각국 정상들이 도착하는 10일까지 선언 초안을 완성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1백84개국에서 정상 또는

아이 올려퍼지는 등 시종 활기가 넘쳐 불과 5km 떨어진 본회의장의 가라앉은 분위기와 대조를 보였다.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원수는 11일 열리는 연회에서 최상석인 마르그레테 2세 덴마크 여왕의 옆자리에 앉는 '영광'을 차지했는데, 이는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가 있어 합의에 진통을 겪었다.

결국 선진국이 제안한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차별금지 원칙 등 5대 노동기준을 명시하는 대신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해 이들 5대 노동기준과 관련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준수'가 아니라 이 협약을 '존중'한다는 식으로 문언을 정리했다. 이와 함께 개도국이 강력히 요구한 '개발권' 조항은 실천계획에 넣기로 합의됐으나 "개발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개도국의 노력을 지원한다"는 내

선언문 협상 3시간 연장 밤샘조율 5대노동기준 강제력 없이 명시만

대표가 참석한 이번 회의는 떠들썩한 외양에 비해 내실없는 잔치가 될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핵심 의제였던 20/20 계약이 사실상 무산된 데다 65쪽 10개 조항으로 이뤄진 폐막선언도 구속력 없는 권고사항으로 물러설 전망이어서 아프리카 등 빈국 대표들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비정부기구(NGO)의 회의장은 여러색의 풍선에 록 음

각국 지도자들이 외교의전상 오래 집권한 순으로 앉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이 설명했다.

한편 미국의 대쿠바 제재에 반대해온 프랑스의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은 오는 13일 파리에서 카스트로와 회담할 것이라고 엘리제궁이 발표했다.

◇...선언문과 실천계획에 대한 막바지 축조심의를 벌이고 있는 사회개발정상회의 전체실무위원회는 '노동자 권리 보호'조항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큰 견해차이

용으로 표현이 완화됐다.

◇...10일 김영삼 대통령과 대구 모 수행원이 코펜하겐에 도착함에 따라 직원이 고작 4명밖에 안되는 한국대사관측은 영접준비에 넋을 빼앗기고 있다. 한국대사관은 덴마크 교민은 물론 인근 스웨덴 등지의 유학생들에게까지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스웨덴에 파견되어 있는 한 연구기관 연구원은 "덴마크 영사로부러 '제발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코펜하겐/진재학 기자 외신종합

안 3/1. 82. ①

빈부격차 해소 없이 세계평화·안전 없다

사회개발 정상회의 개막...130국 참가

【코펜하겐=진재학 기자】 유엔이 주관하는 지구촌의 빈곤 추방을 위한 사회개발정상회의가 6일 오전 10시(한국시각 오후 6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각국 정부대표단, 언론인, 비정부기구(NGO) 대표 등 1만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됐다.

▶관련기사 7면

이날 회의는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과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의 개막연설에 이어 라스무센 총리를 의장으로 선출한 뒤 각국 대표단의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 대표단장인 서상목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경험을 소개하고 △개도국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무역장벽 완화 △저개발국에 대한 교역조건 개선 등 세계무역기구의 배려 등 선진국의 좀더 많은 양보와 국제협력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를 마무리짓는 11~12일에는 유엔 창설 이래 가장 많은 1백30여 나라 정상들이 함께 모여 '빈부격차 해소와 사회발전이 없이는 국내 또는 국가간 평화와 안전도 없다'는 인식을 확인하는 선언문과 '가난한 나라에 대한 부채 탕감 및 선진국의 지원 확대, 노동·인권·환경·여성 보호, 사회개발 및 복지분야 투자 확대' 등에 관한 실천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다.



사회개발 정상회의 코펜하겐 통신

유엔사회개발 정상회의의 3일째인 8일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국가들은 최빈국 부채탕감과 20/20계약의 수정안에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국들에 따르면 오는 12일 폐막회의에 채택될 최종선언문을 협상하고 있는 참가국들은 이날 "아프리카 및 최빈국 외채탕감은 '사

상 무력화됨에 따라 본래의 취지에서 상당히 후퇴했다는 평가다.

◇...이에 앞서 미국은 앞으로 10년간 1억달러를 아프리카와 아시아 및 중남미 여성들의 교육에 내놓을 것이라고 8일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 미 대통령 부인은 이날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연설을 통해 이 "야심찬" 계획

제공 공약의 이행을 촉구했다.

◇...비정부기구(NGO)포럼 C동 433호에선 12개 한국 민간단체 모임인 '인간사회발전 한국포럼'이 주최한 '한국형 경제발전, 제3세계의 모범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8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대환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인하대 교수)은 "분배구조의 왜곡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가져온 한국형 발전모델은 제3세계가 뒤따라야 할 모범이 아니라 실패의 교훈"이라 말했으나, 참석한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의

한국형 발전모델 토론 성황 최빈국 부채탕감 수정 합의 방글라데시 빈민은행 주목

안별'로 선택하되 양자간 채무를 최고 67%까지 감면해 준다"는 것과 "20/20계약은 관심 있는 국가만 여기에 따르기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는 것이다.

전날까지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회의장에선 실천력 있는 최종 합의문 채택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은 최빈국의 외채 전액탕감을 요구하던 아프리카 등 최빈국의 최초요구에서 후퇴한 것인 데다 유엔이 야심차게 내놓았던 20/20계약이 "관심 있는 나라만 따른다"는 식으로 사실

은 "여성의 초등교육 이수비율을 20% 늘리고 여성의 문자해독률을 20%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11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북한의 김홍립 주 덴마크 대사는 주어진 시간보다 1분 정도 짧은 6분 동안 한국어로 연설했다.

김 대사는 "국제사회는 역사적으로 지속적인 불평등을 야기해왔으며 따라서 선진국은 개도국의 사회개발을 위해 원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 국민총생산의 0.7% 원조

경제발전 자체는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을 퍼기도 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대통령 부인의 연설에서 '제3세계의 모범'이라 불리운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농민은행)이 각국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20년전 42명의 빈민층 여성들에게 30달러를 빌려주며 시작된 '비이윤 은행'은 은행자본의 90%가 빈곤층들에게 있으며, 90% 이상을 빈곤층 특히 여성들에게 대출함으로써 방글라데시에서 1백만가구가 이상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코펜하겐/진재학 기자 외신종합

95 3/2(14)

다음은 한국 정부가 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와 국내 12개 단체가 공동으로 집필해 '비정부기구포럼'에 내놓은 '한국경제발전에 관한 보고서'를 각각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1.서론

지난 30여년간 국민총생산은 연평균 8% 이상 증가하였으며, 1인당으로는 61년 82달러에서 93년 7천4백66달러로 증가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사회개발부문도 많은 진전을 보여 기대수명이 남자는 70년 59.8살에서 89년 66.9살로, 여성은 66.7살에서 75살로 늘어났으며, 영아사망률도 65년 1천명당 61.8명에서 90년 12.8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사회개발부문의 발전은 경제성장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2.빈곤퇴치

60년대와 70년대 초기의 경제개발전략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발전 중심으로 이은 자본과 기술이 열악한 당시 상황에서 적절한 전략이었다고 평가된다.

한국정부의 '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보고서'

그러나 1970년 중반 노동집약적 부문에 대한 해외경쟁이 심화되고 국방산업 강화 필요성 등으로 중화학공업 육성 전략을 채택함에 따라 대규모 기업집단이 등장한 반면, 소득분배 구조가 악화 등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80년대 들어 구조조정 등을 통해 이런 부작용은 완화되었다.

빠른 경제성장은 빈곤 퇴치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절대빈곤층은 65년 전인구의 41.4%에서 95년 3.9%로 감소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적부조 자원 확충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최저생계수준 이상을 보장하고 빈곤층에 대한 교육과 직업훈련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배정할 것이다.

3.생산적 고용

한국의 실업률은 65년 7.3%에서 93년 2.4%로 크게 낮아졌다. 국고 졸업율은 99.9%이며 고교 진학률은 93년 현재 98.2%, 대학 진학률은 38.4%에 이르고 있다. 이런 높은 교육 수준은 양질의 노동력을 창출했다. 정규교육과 별도로 1967~91년까지 약 1백60만

명이 각종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았다.

정부는 앞으로 고용취약계층인 여성·장애인·고령자들의 고용을 제고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강구해나갈 것이다.

또한 고용안정과 노동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63년 산재보험을 도입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은 강제가 입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실업급여 지급 등을 위한 고용보험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4.사회통합

우리사회에서 장애인·노령인구 그리고 청소년 및 여성 집단은 경제개발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소외계층으로 남아 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아동복지법, 특수교육진흥법' 등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나가고 있으며 직접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 개발불균형에 따른 지역간 격차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국토개발계획'은 앞으로 이런 격차를 해

소하기 위해 적절하게 재조정될 것이다.

지방자치제 도입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사회·정치적 실험이며 지방정부가 지역개발을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독립지방세 도입, 국세의 지방세 이양, 재산세 제고 그리고 지방정부의 채무조달에 대한 규제완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5.결론

지난 30여년간의 경제성장으로 한국인은 과거 어느때보다 건강·의료·교육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강제로 사회개발은 경제성장에 비해 낙후돼 있으며 도시화에 따른 부산물인 다양한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비정부기구(NGO)의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

지난 수십년간 사회정책 특히 기본인권 보장, 노동운동, 환경보호, 빈곤퇴치 그리고 교육개선 등의 영역에서 민간기구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정부는 그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고취하고 사회개발정책에서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자 한다.

□ 막내린 사회개발정상회의 결산

한 3/13, 82.
①

코펜하겐/진재학 기자

가난 퇴치와 고용 확대, 사회통합 증진을 통해 지구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제로 열린 코펜하겐 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가 10개항의 공약을 담은 '선언문'과 공약이행을 위한 '실천계획'을 채택하고 6일간의 회의를 끝냈다.

이번 회의는 회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공약과 실천프로그램 내용이 준비위가 마련한 초안에서 크게 후퇴한데다 사회개발을 위한 새로운 재원 마련에도 실패해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개선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으나 77그룹 및 중국으로 대표되는 개도국과 유럽연합(EU) 및 미국 등 선진국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외채 문제의 경우 유엔이 아프리카 등 최빈국으로 분류한 47개국에 대해 애초 시안에서 제시했던 '오는 96까지 전면 탕감' 문안을 폐기하고 '사안별로' '단계적으로' '최고 67%'까지 감면해준다는 지난해 12월의 파리클럽 협약을 원용했다.

또 유엔은 인간사회개발을 위한 투자를 제도적으로 늘리기 위해

수정됐다.

그러나 이번 회의의 결과는 각국 정상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협력과 사회개발에 관해 일정수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한국이 최빈국 외채경감을 위해 제공한 약 5천만달러 규모의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또 현재 ODA 기금에 GNP의 0.04% (1억6천만달러) 수준을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늘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와함께 상징적인 조항이지만

외채등 빈부국 격차해소 실패 인간중심 개발 전환 좋은계기

그러나 냉전체제 종식이후 기존의 국가안보와 경제중심의 개발논리를 인간안보와 인간중심의 개발이 중시되는 사고 및 개발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고 지구상의 광범한 빈곤퇴치를 위해 세계가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

또한 정부간 회의와 별도로 비정부기구(NGO) 포럼을 연 세계 2천5백여개 비정부기구들은 이번 회의의 정신을 각국에 전파하고 이를 실천하는 주체적인 세력으로 등장해 앞으로 정부와 사실상 대등한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채 탕감 등 세계적 차원의 부의 불평등 구조

원조기금과 국가예산의 각 20%를 의무적으로 사회개발에 쓰도록 하는 내용의 20/20계약을 내놓았으나 이 또한 국제문제 전문가들이 예측한 대로 큰 진전이 없었다.

20/20계약은 '관심있는 국가만이 이를 수용한다'는 식으로 절충돼 구속력없는 상징적인 조항으로 남게 됐으며 개도국 지원을 위한 정부개발원조(ODA) 기금 증액문제는 선진국이 GNP의 0.7%선까지 끌어올리는데 '노력하는' 수준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이와함께 새로운 사회개발 투자 기금 설정은 깊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으며 '노동권'과 '개발권'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입장 편한 대로 해석이 가능하도록 문안이

20/20계약이 실천계획에 들어간 만큼 민간단체들로부터 국가예산의 20%이상을 사회복지 등 인간 사회개발부문에 투자하도록 강한 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리고 불법 외국인취업자들의 인권보장 등에 대해서도 정부-민간차원에서 국내의 감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의 활동은 국제외교력의 부재를 그대로 드러냈다.

또 정부 고위급 대표단 수석대표인 서상목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내 정치문제로 도중에 귀국해버려 막후 협상이 불꽃튀는 국제외교무대에서 공백을 자초했을 뿐만 아니라 회의의 중요성을 정부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 서상목 장관 사회개발정상회의 일정 왜 취소했나

3/12(4)

“국내정치문제로 귀국땐 비판받을 것”

날치기 위해·복지부 깜짝쇼·YS메시지 전달 추측 무성

김성호 기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서상목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의 급거귀국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개발정상회의 주무부처 장관인 동시에 정부대표단장으로 참석했던 서 장관이 애초 일정보다 무려 닷새나 앞당겨 10일 오후 귀국함으로써 조기귀국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귀국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서 장관은 코펜하겐의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 각국 대표들과 회담을 갖고 11일 김영삼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하는 동안 배석한 뒤 스웨덴을 거쳐 오는 15일까지 귀국할 예정이었다.

서 장관은 서울에 도착한 뒤 귀국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국내 상황이 여수선하고 궁급해서 왔을 뿐”이라며 더이상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다. 서 장관의 측근들 역시 “국회상황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할 뿐 시원스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서 장관은 현직 각료이지만 현재



민자당 서울 강남지구당 위원장인 동시에 민자당 전국구 의원이기도 하다.

정치권에서 서 장관의 귀국이 유로 거론되는 이야기로는 우선 민자당이 지방자치단체 선거의 정당공천 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통합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서 장관의 조기귀국을 종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전에도 민자당은 법안을 날치기처리하기 위해 해외여행중이거나 지역에 내려가 있는 의원들에 대해 조기 귀국과 상경을 지시했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김 대통령이 귀국 뒤 현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발표할 보건복지부 관련

‘깜짝쇼’ 재료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귀국했다는 것이다. 이밖에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김 대통령으로부터 현 정국과 관련한 종류의 메시지를 전달받아 귀국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서 장관의 조기귀국이 어떤 이유에서든, 과연 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 일정을 취소하면서까지 귀국할 급박한 상황이었던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여론이 강하다. 이번에 최초로 열린 이 회의는 무려 1백93개국의 정상 및 정부대표들과 수많은 비정부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전지구적 문제인 빈곤퇴치와 고용·여성·환경 문제 등을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유엔주최 행사중 가장 큰 규모로 꼽히는 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에 주무부처 장관이 예정된 행사를 중단하고 중도에 귀국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만약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서둘러 귀국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제적인 망신일 뿐 아니라 국민적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의 날 축하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비정부기구의 여성대표들이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비정부기구 회의의 단상에서 이를 축하하고 있다.

코펜하겐 / AFP 연합



사회개발 정상회의 코펜하겐 통신

사회개발정상회의의 사흘째인 8일은 '세계 여성의 날'로 코펜하겐 정상회의장에서도 이를 기념하고 여성의 권익 신장을 요구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으며 한국은 이날 지역별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유엔개발계획은 이날 세계의 여성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사회개발정상회의에 제출해 기존 여성의 절반이 가정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며 "어떤 사회도 여성을

◇...사회개발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비정부기구 대표 8천여명은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이날 밤 시내에서 1시간 동안 핫불 시가행진을 벌이며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체제를 비난했다.

제3세계 비정부기구의 여성대표 12명도 보다 많은 개발자원과 제3세계 부채문제의 구체적 해결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케냐의 비정부기구 그린벨트운

서구쪽 입장이 반영된 타협안이 통과됐지만 이 조항은 앞으로 가족문제를 다루는 모든 국제문건에서 '원용될 것'이라고 채택의의를 설명했다.

◇...각 지역별로 27명을 뽑는 총회 부의장국 가운데 아시아지역에 배당된 6개국 선출을 놓고 한국 등 9개국이 후보로 나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7일 벌어진 막후조정에서 스리랑카가 자진사퇴하는 대신 스리랑카가 지명한 한국·일본·중국·인도·인도네시아·카타르가 후보로 결정됐으나 탈락한 파키스탄·필리핀 가운데 필리핀이 부의장국을 고집해 진통을 겪었다.

한국, 부의장국 피선·가족조항 통과

9인 총합가지수		KOSPI 200(산본지수)		주식시세표	
▲ 306 (↑ 9)	▲ 943.75 (+3.67)	▲ 105.10 (+0.43)	▲ 27320	▲ 25900	100
▲ 306 (↑ 5)	▲ 27320	▲ 22200	▲ 27320	▲ 4100	900
▲ 306 (↑ 5)	▲ 27320	▲ 22200	▲ 27320	▲ 4480	800
▲ 306 (↑ 5)	▲ 27320	▲ 22200	▲ 27320	▲ 12900	700
▲ 306 (↑ 5)	▲ 27320	▲ 22200	▲ 27320	▲ 21800	600
▲ 306 (↑ 5)	▲ 27320	▲ 22200	▲ 27320	▲ 2000	500
▲ 306 (↑ 5)	▲ 27320	▲ 22200	▲ 27320	▲ 2000	400
▲ 306 (↑ 5)	▲ 27320	▲ 22200	▲ 27320	▲ 1900	300
▲ 306 (↑ 5)	▲ 27320	▲ 22200	▲ 27320	▲ 1800	200
▲ 306 (↑ 5)	▲ 27320	▲ 22200	▲ 27320	▲ 1700	100
▲ 306 (↑ 5)	▲ 27320	▲ 22200	▲ 27320	▲ 1600	0
▲ 306 (↑ 5)	▲ 27320	▲ 22200	▲ 27320	▲ 1500	0
▲ 306 (↑ 5)	▲ 27320	▲ 22200	▲ 27320	▲ 1400	0
▲ 306 (↑ 5)	▲ 27320	▲ 22200	▲ 27320	▲ 1300	0
▲ 306 (↑ 5)	▲ 27320	▲ 22200	▲ 27320	▲ 1200	0
▲ 306 (↑ 5)	▲ 27320	▲ 22200	▲ 27320	▲ 1100	0
▲ 306 (↑ 5)	▲ 27320	▲ 22200	▲ 27320	▲ 1000	0
▲ 306 (↑ 5)	▲ 27320	▲ 22200	▲ 27320	▲ 900	0
▲ 306 (↑ 5)	▲ 27320	▲ 22200	▲ 27320	▲ 800	0
▲ 306 (↑ 5)	▲ 27320	▲ 22200	▲ 27320	▲ 700	0
▲ 306 (↑ 5)	▲ 27320	▲ 22200	▲ 27320	▲ 600	0
▲ 306 (↑ 5)	▲ 27320	▲ 22200	▲ 27320	▲ 500	0
▲ 306 (↑ 5)	▲ 27320	▲ 22200	▲ 27320	▲ 400	0
▲ 306 (↑ 5)	▲ 27320	▲ 22200	▲ 27320	▲ 300	0
▲ 306 (↑ 5)	▲ 27320	▲ 22200	▲ 27320	▲ 200	0
▲ 306 (↑ 5)	▲ 27320	▲ 22200	▲ 27320	▲ 100	0
▲ 306 (↑ 5)	▲ 27320	▲ 22200	▲ 27320	▲ 0	0
▲ 306 (↑ 5)	▲ 27320	▲ 22200	▲ 27320	▲ 0	0

주식시세표... 9인 총합가지수... KOSPI 200(산본지수) 105.10(+0.43) ... 주시세표 ... 9인 총합가지수 943.75(+3.67) ...



관심 코펜하겐 사회개발정상회의 비정부기구 회의장의 '지구촌빌딩'에서 정상회의 전날인 5일 한 참가자가 인구가 세계의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전시물을 관측경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다. 코펜하겐 / AFP 연합

외채·노동권 선진-개도국 격론

'어린이노동' 국가 재정지원 삭감 대립 3/4 (1)



사회개발 정상회의 코펜하겐 통신

세계 1백80여개국 정상 등 1만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일 개막된 제1회 사회개발정상회의에서는 많은 참가인원수 만큼이나 많은 말들이 오고가고 있다.

갈라 총장 국가책임 강조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개막연설에서 "우리는 이번 회담에서 어떻게 가난과 싸우고, 사회적 배제 및 해체 이 특재하며 어떻게 생사성 있는

기구(ILO)가 규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린이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일부 빈곤국들은 이런 움직임에 반발했다.

선진국들은 또 이번 회담을 통해 국민국들의 대외부채 부담 경감문제를 논의할 의사는 있으나 이들 국가에 대한 부채를 무효화하거나 추가차관 제공은 논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

곤은 마약·에이즈·공해 등의 형태로 입국사증(비자) 없이 국경을 넘고 있다"고 이번 회의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서방선진국들에게 경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세계 각지의 2천여개 비정부기구들이 대 표단을 파견해 실질적인 사회개발과 빈곤퇴치를 위한 정책입안을 다루는 이 회의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13억명의 전세계 빈곤인구 가운데 약 20%인 2억5천만명이 이들 비정부기구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등 비정부기구의 역할은 냉전붕괴 뒤 국가가 맡아왔던 많은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지난 70년부터 90년까지 개발도상국들에 대

<p>6월 중합주가지수 933.44(+14.28)</p> <p>KOSPI 200(선물지수) 104.15(+1.72)</p> <p>주식시세표</p>	<p>인원 5190</p> <p>인원 10940</p> <p>인원 1400</p> <p>인원 1900</p> <p>인원 27190</p> <p>인원 55900</p> <p>인원 700</p> <p>인원 800</p> <p>인원 22800</p> <p>인원 50000</p> <p>인원 12000</p> <p>인원 24000</p> <p>인원 20500</p> <p>인원 25000</p>	<p>인원 14100</p> <p>인원 19400</p> <p>인원 8100</p> <p>인원 15330</p> <p>인원 19000</p> <p>인원 27190</p> <p>인원 55900</p> <p>인원 700</p> <p>인원 800</p> <p>인원 22800</p> <p>인원 50000</p> <p>인원 12000</p> <p>인원 24000</p> <p>인원 20500</p> <p>인원 25000</p>	<p>인원 14100</p> <p>인원 19400</p> <p>인원 8100</p> <p>인원 15330</p> <p>인원 19000</p> <p>인원 27190</p> <p>인원 55900</p> <p>인원 700</p> <p>인원 800</p> <p>인원 22800</p> <p>인원 50000</p> <p>인원 12000</p> <p>인원 24000</p> <p>인원 20500</p> <p>인원 25000</p>
---	--	--	--

이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율을 보이고 있다. 선진국들의 투자율은 15.0%에서 26.1%로, 40%에 육박하는 반면 개발도상국들의 투자율은 9%에서 10.3%로, 선진국들보다 낮아지고 있다.

빈부격차 해소 없이 세계평화·안전 없다

사회개발 정상회의 개막...130국 참가

【코펜하겐=진재학 기자】 유엔이 주관하는 지구촌의 빈곤 추방을 위한 사회개발정상회의가 6일 오전 10시(한국시각 오후 6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각국 정부대표단, 언론인, 비정부기구(NGO) 대표 등 1만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막됐다.

▶관련기사 7면

이날 회의는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과 리스무센 덴마크 총리의 개막연설에 이어 리스무센 총리를 의장으로 선출한 뒤 각국 대표단의 기조연설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 대표단장인 서상목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경험을 소개하고 △개도국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무역장벽 완화 △저개발국에 대한 교역조건 개선 등 세계무역기구의 배려 등 선진국의 좀더 많은 양보와 국제협력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를 마무리짓는 11~12일에는 유엔 창설 이래 가장 많은 1백30여 나라 정상들이 함께 모여 '빈부격차 해소와 사회발전이 없이는 국내 또는 국가간 평화와 안전도 없다'는 인식을 확인하는 선언문과 '가난한 나라에 대한 부채 탕감 및 선진국의 지원 확대, 노동·인권·환경·여성 보호, 사회개발 및 복지분야 투자 확대' 등에 관한 실천계획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들도 웃도 허아수 등내 국제회의 유취야프 떠등와

<p>〈이웃사랑행동보상금 5000〉 복지회 본회 출자금 후원 이회용 수취하도록 (각가방등)이회이 도와 이회용 보에 수취</p>	<h2>이회와늘주거</h2>	<p>1780-1201 1780-1201 1780-1201 1780-1201 1780-1201 1780-1201 1780-1201 1780-1201 1780-1201 1780-1201</p>
---	-----------------	--

“한국, 개도국 원조 크게 늘릴것”

김대통령 기조연설

【코펜하겐=장정수 기자】 김영삼 대통령은 11일 낮(현지시각) 덴마크 코펜하겐의 벨라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WSSD)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와 인적개발 지원을 크게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한국은 개발도상

국들이 생산과 고용을 창출하고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공적개발 원조 규모를 우리의 경제능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크게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한국은 80년대부터 개도국의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전문가를 파견해왔다”며 “앞으로 이를 크게 늘려 2010년까지 3만명 이상의 인력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85 7/12 (1)

빈곤 퇴치 공동선언 합의

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빈국 외채경감 강조

【코펜하겐 AFP 로이터=연합】 세계 1백85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사회개발정상회담은 11일 최종회의에 들어가 각국 지도자들은 정해진 순서에 의해 행한 연설에서 빈곤 퇴치와 불의의 추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앞서 참가국들은 일주일간의 논의 끝에 세계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10개항의 원칙과 65쪽의 행동계획으로 구성된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선언내용 7-13면

이번 최종회의에서는 의장인 덴마크 총리와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의 기조 연설에 이어 사회개발 문제에 대한 각국 정상들의 견해를 들은 뒤 12일 폐막식을 갖고 앞서 합의된 코펜하겐 선언을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첫날 회의에서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주요 개도국 지도자들은 가난이 세계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는데 공감을 표시하고, 가난한 나라에 대한 외채경감과 원조 확대, 경제개발을 위한 새로운 접근,

선진국 시장의 개방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중국의 리펑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부국들은 좀더 큰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면서 빈국들에 대한 원조 확대를 촉구하고 외채를 탕감해줄 것을 강조했다.

덴마크의 폴 라스무센 총리는 이런 개도국들의 비판적 분위기에 호응해 외채는 빈국들의 최대 난제라고 지적하고 부국들은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국가들의 부담

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란츠 브라니츠키 오스트리아 총리는 "오스트리아는 빈국들에 대한 1억달러의 외채를 탕감해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코펜하겐 선언은 빈곤의 퇴치를 위해 원조의 효율적 집행을 적극 권장하고 빈국들의 외채 탕감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의 행동계획을 담고 있으나 구속력이 없어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각국 정상들은 빈국들에 대한 원조 확대를 촉구하는 한편, 빈국들의 경제개발을 위한 새로운 접근, 선진국 시장의 개방을 촉구하는 등 빈국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각국 정상들은 빈국들에 대한 원조 확대를 촉구하는 한편, 빈국들의 경제개발을 위한 새로운 접근, 선진국 시장의 개방을 촉구하는 등 빈국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각국 정상들은 빈국들에 대한 원조 확대를 촉구하는 한편, 빈국들의 경제개발을 위한 새로운 접근, 선진국 시장의 개방을 촉구하는 등 빈국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15 3/1204
12개 단체의 '한국경제발전에 관한 보고서'

1. 한국의 빈곤실태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절대빈곤층은 93년 기준으로 전인구의 4.8%(2백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10%, 상대적 빈곤층은 30%로 추정되고 있다. 빈곤층의 사회적 특징으로는 장애인·만성질환자·노령자·저학력자 등 취약계층이 다수 차지하고 있으며, 불안정한 취업구조에 주거·보건·의료 혜택에서 소외당하고 있다. 또 농촌빈곤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빈곤정책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너무 낮고, 보호내용 및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전달체계의 미비와 자원 조달의 한계를 안고 있다.

2. 도시집중과 주택 문제

한국은 60년 39.1%이던 도시인구가 93년 80% 이상으로 높아져 주택문제 등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문제들로 시달리고 있다. 전국 가구 중 약 25%에 달하는 292만 가구가 단칸방에 거주하고 있고 빈곤층 밀집지역에는 닭장집, 비닐하우스와 같은 불량주택이 특징이다.

주택가격은 연소득대비 7.5배에 이르며, 전·월세값도 매우 높다. 정부 재정중에서 주택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89년 2.3%에서 93년 1.0%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도시재개발 사업은 빈곤층의 주거불안정을 심화시키고, 폭력적인 강제철거도 방치되고 있다.

3. 경제성장과 노동상황

실업률 자체는 2.4%로 매우 낮지만 15~29살의 젊은 층의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고 점차 악화되고 있다.

또 한국정부는 △복수노조 금지 △공무원·교원의 노조결성권 거부 △정당가입 금지 △정치활동 금지 △노조활동 개입 △파업에 경찰 동원 등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노동정책을 취하고 있다.

물가인상에 따른 높은 생계비 증가로 실질 임금이 줄어들어 노동자 가족의 생활수준을 악화시키고 있다.

4. 경제발전과 여성문제

한국경제 발전 뒷면에는 여성을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에 묶인 가사노동과,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력 수급조절을 위한 산업예비군으로 활용하였다. 현재 여성가구주는 전체 가구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절대빈곤 상태에

놓인 가구주가 3만3천여세대나 되고 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3년 36.4%에서 93년 47.2%로 높아졌으나 저임금, 장시간 노동, 비인간적 근로조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전반적인 여성 차별 현실이 극복되기 위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등 법적 보완, 모성보호조항 확대, 남성위주 문화 추방 등이 절실하다.

5. 경제개발과 농민 상황

한국경제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부문의 성장은 비농림부문의 연평균 8%에 비해 훨씬 낮은 2.2% 성장에 불과하다.

농업부문은 우루과이라운드로 위기를 맞고 있으며, 대외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술발전 및 정부지원이 미약하다. 또한 도시에 비해 높은 의료보험료를 물어야 하고 경영이양 장려금, 농업재해 보상금, 재해보험 등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이다.

6. 경제성장의 사회적 영향

60년대 이후 성장위주의 개발독재로 민주화운동 탄압, 군사쿠데타 등 민주

정치가 압살되고 권력교체 과정이 왜곡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치적 권리와 인권의 침해, 양심·사상의 자유에 대한 통제와 지역차별 정책, 사법부·군·경찰의 권력 시너화를 가져왔다.

국가보안법은 주로 인권탄압의 도구로 사용돼왔다. 그러나 한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향 역시 더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되고 있다.

7. 경제개발과 환경오염

저임금과 외자 도입, 수출위주의 개발전략은 필연적으로 공해산업 유치 등 환경문제의 희생을 가져왔다.

한국의 환경오염의 실태는 대기오염의 경우 이미 80년대초 전국 주요도시가 아황산가스 연평균 오염기준치를 넘어섰고, 주요 4대하천의 수질상태는 상수원수 2급기준을 크게 넘어서고 있다.

또한 인체와 환경의 위해도가 큰 특정산업폐기물이 연평균 22.5%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연안오염, 생태계 파괴도 심각한 실정이다.

정부의 환경관련 공공투자 규모는 국민총생산 대비 0.3%에 불과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주민들의 공동노력과 개발 패러다임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사회개발정상회의 10개항 선언문 요지

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각국 정부 대표들이 합의한 10개항의 선언문은 사회개발의 포괄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12일 채택될 선언문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 1) 사회개발 달성을 위한 경제·정치·사회·문화·법적 환경을 창조한다.
- 2) 인류의 윤리·사회·정치·경제적 의무로서 단호한 국가단위의 행동과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세계의 빈곤을 근절한다.
- 3) 경제·사회적 정책의 우선사항으로 완전고용의 달성을 촉진하며 모든 남성과 여성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생산적인 직업과 일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적인 생활을 영위토록 한다.
- 4) 불우하고 약한 단체와 개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참가와 안전·단결·기회의 평등·다양성 존중·관용·무차별·모든 인권의 존중과 촉진에 기초한 정의롭고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사회적 통합을 촉진한다.
- 5)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완전한 존경을 촉진하며, 남녀의 평등과

공평을 달성하며, 정치·사회·경제·시민·문화적 생활과 개발에서의 여성의 지도적 역할과 참여를 인정하고 촉진한다.

6) 기본적인 의료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접근과 정신·육체적 건강에 대한 최상의 표준, 그리고 질 높은 교육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기회를 촉진하고 달성한다.

7) 저개발국가와 아프리카의 경제·사회적·인적자원의 개발을 촉진한다.

8) 구조적 조정 계획들을 수립할 때 빈곤의 근절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사회적 통합의 촉진이라는 사회개발 목표들의 포함을 보장한다.

9) 정상회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별 행동과 지역·국제적 협력을 통해 사회개발에 할당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자원을 증대시킨다.

10) 동반자 정신 아래 유엔이나 다른 다자간 기구를 통해 사회개발을 위한 국제·지역·소지역적 협력의 틀을 개선하고 강화한다.

코펜하겐/AFP 연합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
	C 6-43	45

1995년 3월 11일·토요일 3

사설

사회개발정상회의가 미룬 일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하는 말들이 점점 낯설어지고 있다. 사회 내부에 빈곤 문제가 여전히 첨예하게 도사리고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서두를 만큼 대외적으로 우리는 중진국 졸업생으로 규정되고 있다. 우리의 감회나 외부의 대접과는 무관하게 빈부 격차는 세계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다. 세계화, 세계경제 등 국경 없는 세계를 지향하는 이 시대의 요청과는 별도로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빈부의 격차와 그로 인한 불신과 대립은 이왕에 경험한 체제의 대결보다 한층 더 집요하고 절박한 투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

여러 나라의 정상들 비롯해서 1백90여 나라 정부 및 비정부 대표 1만5천여명이 지난 6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1회 사회개발정상회의를 열었다. 유엔이 주재한 이 회의는 빈곤 퇴치, 근로조건 개선, 후진국의 부채 감면 등 사회개발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8일에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전세계 여성의 지위와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가난한 가운데도 상대적으로 더 크게 꺾박받는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가일층 분발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 대표단이 제안한 사회 통합과 가족의 책임이란 조항이 폐막 선언

과 함께 채택될 실천계획에 포함돼 상당히 고무된 표정이나, 민간단체가 주관한 한국포럼에서는 발제를 맡은 교수가 분배구조의 왜곡과 사회 불평등을 초래한 한국의 발전 모형은 제삼세계가 본받을 모범이 아닌 실패의 교훈이라고 열띤 주장을 펴기도 했다. 유럽을 순방중인 김영삼 대통령이 오늘 현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회의가 야심적인 개최 목적에 상응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듯하다. 원조국은 원조액의 20%를, 수혜국은 전체 예산의 20%를 식량 교육 보건 등 사회개발에 우선 배정하자는 이른바 20/20계약을 관심 국가들의 합의에 따라 시행하자고 한발 물러섰다. 국민총생산의 0.7%를 공식개발원조로 할애하겠다는 애초의 약속도 이 수준까지 올리도록 노력한다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아프리카 일부 국가를 포함한 최빈국에 대한 외채 경감 계획 역시 96년까지의 전액 탕감이 이른 시일 안에 3분의 2 감면으로 바뀌고 말았다. 합의 도출의 실패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차이에도 있지만, 부담 증대를 꺼린 미국의 반대도 한몫을 거들었다. 선진국으로의 진입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의 수행을 전제로 한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선택이 어떤 것일지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

3/2(6)

유엔-비정부기구 '한마음'

선진국 양보 압력 손잡고 행사 사실상 '공동주최'

본회의장 자유출입·축제마당제공 NGO 각별배려

코펜하겐 / 진재학 기자

유엔 주관으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 사회개발 정상회의는 사실상 유엔과 비정부기구(NGO)들의 공동주최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회의가 제안되고 성사되기까지는 저개발국의 광범위한 빈곤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유엔의 상황인식과 외채탕감 등 개도국의 강력한 경제적 요구가 기본 추진력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저개발 및 개도국의 빈곤 완화, 고용 창출, 사회통합력 증진 등 정상회의가 내건 주제가 내용있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서방 선진국의 경제적 양보가 반드시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유엔, NGO 끌어들이 상황 돌파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지난 91년 사회개발 정상회의를 제안했을 때만 해도 이런 사정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유엔은 이런 상황을 돌파해나가기 위한 국제 압력수단으로 비정부기구들을 끌어들이었다.

92년 리우 환경회의와 94년 카이로 인구개발회의 등 잇따른 각종 국제회의를 통해 그 역할의 중요성을 높여가고 있는 비정부기구로서는 인간존엄성 회복과 지구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유엔의 제의야말로 '달리는 말에 채찍'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정부기구들은 이에 힘입어 사회개발과 인



사회개발 정상회의
코펜하겐 통신

간의 안전보장 및 국제적 부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더 많은 투자와 양보를 하도록 자국 정부는 물론 주로 서방 선진국에 압력을 가했다.

유엔에 등록된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지난해 1월 1차 준비위 때 76개에 불과했던 것이 8월 2차 때는 2백85개, 올 1월 마지막 3차 준비위 때는 무려 2천5백개(대표 1만여명)가 공식 등록을 마치고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등 큰 세력으로 등장했다.

이번 회의의 주제가 광범위한 만큼 인권·환경·여성·아동·노동·빈민·보건·종교·과학·사회봉사·사회복지 등 셀 수도 없는 다종다양한 분야의 비정부기구들이 회의장에 몰려 들고 있다.

이 기구들에 대한 유엔의 배려는 각별하다. 이들은 취재기자도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본회의장에 유엔에 등록만 마치면 자유롭게 출입해 로비활동은 물론 자료 취득·배포, 회의장 룸 사용, 구두 및 서면연설 기회를 갖는다. 또 본회의장인 벨라센터에서 5km 가량 떨어진 옛 홀만 해군기지창에 마련된 '비정부기구 포럼'은 독자적인 프레스센터까지 갖춘 대규모 축제마당이다. 이곳은 각 단체가 사용하는 수백동의 부스와 각종 전시행사가 벌어지는 '지구촌 마을', 수백개

의 크고 작은 회의실과 코카스룸 등 각종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또한 50달러를 내고 등록을 마치면 덴마크의 어느 지역이나 무료로 다닐 수 있는 철도·버스 자유이용권이 주어진다.

유엔이 이번 회의를 통해 노리는 목표는 자명하다. 즉 냉전체제 붕괴 이후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고 정부개발원조(ODA)기금 관리와 분배 등 경제사회이사회에의 대폭적인 기능강화를 통한 '새로운 유엔'의 탄생을 기하자는 것이다.


경제사회이사회 강화등 피해

이번 회의가 무엇보다 앞으로 비정부기구의 기능과 역할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유엔 주변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한 사회복지 전문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21세기 새로운 복지사회 모형을 찾는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며 기존의 서구형 복지국가 모델을 대신할 이 새 모형에서 비정부기구의 역할은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의 성격도 국가에 대해 요구만 하는 데에서 사회개발 실천 프로그램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바뀌어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미 시위 사회개발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코펜하겐에서 9일 복면을 한 시위대가 '양키고 홈'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실속없는 이번 회의와 세계의 복지에 무관심한 미국의 정책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코펜하겐 / AFP 연합

 **사회개발 정상회의**
코펜하겐 통신

나흘째 최종선언문을 둘러싸고 격론을 벌여온 참가국 대표들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9일 자정인 협상시한을 3시간 연장하는 등 각국 정상들이 도착하는 10일까지 선언 초안을 완성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1백84개국에서 정상 또는

악이 옮겨퍼지는 등 시종 활기가 넘쳐 불과 5km 떨어진 본회의장의 가라앉은 분위기와 대조를 보였다.
◇...피델 카스트로 쿠바 국가원수는 11일 열리는 연회에서 최상석인 마르그레테 2세 덴마크 여왕의 옆자리에 앉는 '영광'을 차지했는데, 이는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가 있어 합의에 진통을 겪었다.
결국 선진국이 제안한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차별금지 원칙 등 5대 노동기준을 명시하는 대신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해 이들 5대 노동기준과 관련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의 '준수'가 아니라 이 협약을 '존중'한다는 식으로 문안을 정리했다. 이와 함께 개도국이 강력히 요구한 '개발권' 조항은 실천계획에 넣기로 합의했으나 "개발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개도국의 노력을 지원한다"는 내

선언문 협상 3시간 연장 밤샘조율 5대노동기준 강제력 없이 명시만

대표가 참석한 이번 회의는 때를 썩힌 의양에 비해 내실없는 잔치가 될 것이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각국 지도자들이 외교의전상 오래 집권한 순으로 앉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이 설명했다.

용으로 표현이 완화됐다.
◇...10일 김영삼 대통령과 대구 모 수행원이 코펜하겐에 도착함에 따라 직원이 고작 4명밖에 안되는

핵심 의제였던 노동 기준에
10일 협상결과가 나온 후
이날 협상결과가 나온 후
이날 협상결과가 나온 후
이날 협상결과가 나온 후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음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음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음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음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음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음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음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음



사회개발정상회의의 카스트로 사회개발정상회의에 참석중인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장이 정치집회에서 연설하기에 앞서 자신과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포스터를 내보이고 있다. 코펜하겐/AP 연합뉴스

□ 막내린 사회개발정상회의의 결산

3/13(수)

코펜하겐/진재학 기자

지난 퇴치와 고용 확대, 사회통합 증진을 통해 지구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제로 열린 코펜하겐 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가 10개항의 공약을 담은 '선언문'과 공약이행을 위한 '실천계획'을 채택하고 6일간의 회의를 끝냈다.

이번 회의는 회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공약과 실천프로그램 내용이 준비위가 마련한 초안에서 크게 후퇴한데다 사회개발을 위한 새로운 재원 마련에도 실패해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개선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으나 77그룹 및 중국으로 대표되는 개도국과 유럽연합(EU) 및 미국 등 선진국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별 진전을 보지 못했다. 외채 문제의 경우 유엔이 아프리카 등 최빈국으로 분류한 47개국에 대해 애초 시안에서 제시했던 '오는 96까지 전면 탕감' 문안을 폐기하고 '사안별로' '단계적으로' '최고 67%'까지 감면해준다는 지난해 12월의 파리클럽 협약을 원용했다.

또 유엔은 인간사회개발을 위한 투자를 제도적으로 늘리기 위해

수정됐다.

그러나 이번 회의 결과는 각국 정상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협력과 사회개발에 관한 일정수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한국이 최빈국 외채경감을 위해 제공한 약 5천만달러 규모의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또 현재 ODA 기금에 GNP의 0.04%(1억6천만달러) 수준을 제공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를 늘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와함께 상징적인 조항이지만

외채등 빈부국 격차해소 실패 인간중심 개발 전환 좋은계기

그러나 냉전체제 종식이후 기존의 국가안보와 경제중심의 개발논리를 인간안보와 인간중심의 개발이 중시되는 사고 및 개발방식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고 지구상의 광범한 빈곤퇴치를 위해 세계가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

또한 정부간 회의와 별도로 비정부기구(NGO) 포럼을 연 세계

원조기금과 국가예산의 각 20%를 의무적으로 사회개발에 쓰도록 하는 내용의 20/20계약을 내놓았으나 이 또한 국제문제 전문가들이 예측한 대로 큰 진전이 없었다.

20/20계약은 '관심있는 국가만이 이를 수용한다'는 식으로 절충돼 구속력없는 상징적인 조항으로 남게 됐으며 개도국 지원을 위한 정부개발원조(ODA) 기금 증액문제

20/20계약이 실천계획에 들어간 만큼 민간단체들로부터 국가예산의 20%이상을 사회복지 등 인간사회개발부문에 투자하도록 강한 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리고 불법 외국인취업자들의 인권보장 등에 대해서도 정부·민간차원에서 국내외 감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의 화두는 국제협력의 부채를



사회개발 정상회의

코펜하겐 통신

3/8 (1)

유엔사회개발 정상회의의 3일째인 8일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국가들은 최빈국 부채탕감과 20/20계약의 수정안에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국들에 따르면 오는 12일 폐막회의에 채택될 최종선언문을 협상하고 있는 참가국들은 이날 '아프리카 및 최빈국 외채탕감은 '사

상 무력화됨에 따라 본래의 취지에서 상당히 후퇴했다는 평가다.

◇...이에 앞서 미국은 앞으로 10년간 1억달러를 아프리카와 아시아 및 중남미 여성들의 교육에 내놓을 것이라고 8일 밝혔다.

힐러리 클린턴 미 대통령 부인은 이날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연설을 통해 이 "아심찬" 계획

제공 공약의 이행을 촉구했다.

◇...비정부기구(NGO)포럼 C동 433호에선 12개 한국 민간단체 모임인 '인간사회발전 한국포럼'이 주최한 '한국형 경제발전, 제3세계의 모범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8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룬 가운데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대환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인하대 교수)은 "분배구조의 왜곡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가져온 한국형 발전모델은 제3세계가 뒤따라야 할 모범이 아니라 실패의 교훈"이라 말했으나, 참석한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의

한국형 발전모델 토론 성황 최빈국 부채탕감 수정 합의 방글라데시 빈민은행 주목

안별'로 선택하되 양자간 채무를 최고 67%까지 감면해 준다"는 것과 "20/20계약은 관심 있는 국가만 여기에 따르기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는 것이다.

전날까지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회의장에선 실천력 있는 최종 합의문 채택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이번 합의문은 최빈국의 외채 전액탕감을 요구하던 아프리카 등 최빈국의 최초요구에서 후퇴한 것인 데다 유엔이 아심차게 내놓았던 20/20계약이 "관심 있는 나라만 따른다"는 식으로 사실

은 "여성의 초등교육 이수비율을 20% 늘리고 여성의 문자해독률을 20%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7일 11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북한의 김홍립 주 덴마크 대사는 주어진 시간보다 1분 정도 짧은 6분 동안 한국어로 연설했다.

김 대사는 "국제사회는 역사적으로 지속적인 불평등을 야기해왔으며 따라서 선진국은 개도국의 사회개발을 위해 원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 국민총생산의 0.7% 원조

경제발전 자체는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반론을 펴기도 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대통령 부인의 연설에서 '제3세계의 모범'이라 불리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농민은행)이 각국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20년전 42명의 빈민층 여성들에게 30달러를 빌려주며 시작된 '비이윤 은행'은 은행지분의 90%가 빈곤층들에게 있으며, 90% 이상을 빈곤층 특히 여성들에게 대출함으로써 방글라데시에서 1백만가구가 이상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코펜하겐/진재학 기자 외신종합

**김대통령 13국정상 초청
선후진국 경제유대 논의**

【코펜하겐=장정수 기자】 덴마크를 방문중인 김영삼 대통령은 유엔 사회개발정상회의(WSSD)를 하루 앞둔 10일 저녁 숙소인 사스 스칸디나비아 호텔에서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을 비롯한 13개국 정상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면서 유엔의 역할증대, 선·후진국간 경제적 유대강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관련기사 5면

김 대통령은 만찬을 주재한 자리에서 한국은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기구 분담금 및 개도국에 대한 정부개발원조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한민국일보 2002년 10월 11일)

대한민국	김영삼	13
미국	조지 W. 부시	13
일본	모리 요시로	13
중국	쑤저펑	13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13
인도	아탈 비하리 바치	13
브라질	페르난두 페조	13
인도네시아	메가워티	13
말레이시아	마하 무하진드라	13
필리핀	글로리아 아로요	13
태국	타나쉴라 친나왓	13
베트남	농 당민	13
캄보디아	노로돔 란나	13
미얀마	우 윈 윈	13
네팔	비라트 코리	13
파키스탄	퍼vez 무샤라프	13
인도네시아	메가워티	13
말레이시아	마하 무하진드라	13
필리핀	글로리아 아로요	13
태국	타나쉴라 친나왓	13
베트남	농 당민	13
캄보디아	노로돔 란나	13
미얀마	우 윈 윈	13
네팔	비라트 코리	13
파키스탄	퍼vez 무샤라프	13